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10(금) ~ 2024.5.16(목)

제공일시 2023 05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10(금) ~ 2024.5.16(목)

제공일시 2024 05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바이든, 중 전기차 관세 4배 올린다... 14일 발표 전망/ 美, 관세 장벽 없는 멕시코 생산 중국 전기차 수입도 차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전기차에 물리는 관세를 4배 인상할 계획함. 14일(현지시각) 관세 대거 인상이 발표될 전망이다
-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전기차 관세율은 지금의 25%에서 수 일 안에 4배인 약 100%로 뛴. 또,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도 2.5% 관세가 추가됨. 지금까지의 25% 관세만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짐
-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유무역 협정 체결 상대국으로 관세 장벽이 없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전기차 수입 차단에 나섬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 전기차 등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세부 관세 인상 계획을 내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함

(파이낸셜뉴스 2024.5.11) 송경재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2024.5.15) 국기연 기자

2. EU, '40년까지 트럭과 버스 배출량 90% 감축 규정 승인

- 유럽이사회는 13일(현지시각) 2040년까지 대형 트럭과 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대형 차량(HDV)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정 개정안을 승인함
- 개정된 규정은 도로 운송 부문의 탄소 감축 효과 외에도 신규 제로 배출 차량(ZEV) 공급을 늘리는 한편, 장기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관련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트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기존 2030년 목표였던 30% 감축에서 45% 감축으로 상향 조정됨
- 더불어 2035년까지는 배출량 65% 감소, 2040년까지는 90% 배출량 감소라는 장기적인 목표가 추가됨

(ESG경제 2024.5.14) 김연지 기자

3. 일본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수립 착수, '20조엔' 투자전략 일환

- 일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함
- 에너지 집약산업이 활성화돼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 13일(현지시각)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2일 도쿄에서 열린 정재계 인사들과 회의에서 탈탄소화와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
- 이는 일본 정부가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2032년까지 20조엔(약 175조원)을 투자하는 정책의 일환임

(비즈니스포스트 2024.5.14) 이근호 기자

1. 최상목 “10조+α 반도체 프로그램… 보조금 아닌 국가전략 稅 공제 연장”

-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민간 펀드 등이 어우러진 10조원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 소재·부품·장비(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임
-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임. 그 대안으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그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고도 밝힘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HPSP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하는 10조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머니투데이 2024.5.12) 유재희 기자

2. “내년 SW공급망 절반 해킹 위험”… 정부, 기업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공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힘
- 이번 가이드라인은 SW 공급망 보안 위협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 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됨
- 100여 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에는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과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담음

(한국경제 2024.5.12) 이승우 기자

3. 강도형 해수부 장관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추진”

- 정부가 국내에 조성 중인 바다숲의 탄소 흡수력을 고려해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함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12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포럼에서 “바다숲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조류의 높은 탄소 흡수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강도형 장관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바다숲을 조성했다”며 “바다숲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민관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힘

(연합뉴스 2024.5.10) 손대성 기자

4. 금융당국·협회·학계 머리 맞대 기후 TF 회의

-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금융협회와 학계가 한데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함
- 금융위원회는 9일 협회와 학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기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 기후 TF는 미래대응금융 TF의 3개 분과 중 하나로, 기후위기와 인구 감소,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변화와 관련된 금융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됨
- 기후 TF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세부 지원 방향과 금융업권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함

(MTN뉴스 2024.5.9) 임태성 기자

5.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 공식 출범… “민관 협력 디딤돌 기대”

-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로 구성된 에너지단체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가 9일 첫 모임을 갖고 공식 출범함
- 협의회는 에너지산업을 아우르는 정책협의체로, 앞으로 매월 정례회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임
- ESCO협회, 민간발전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집단에너지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H2KOREA,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도시가스협회, 민간LNG산업협회, 원전수출산업협회, 원자력산업협회 등 15개 협·단체로 구성됨

(대한경제 2024.5.9) 신보훈 기자

1. “전기차 핵심광물 잡아라”... 스텔란티스, 인니 니켈 제련소 투자 검토

- 유럽 완성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함
- 중국이 장악한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한다는 방침임
- FT는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스텔란티스가 고압산침출(HPAL) 니켈 제련소에 투자하기 위해 발레 인도네시아 및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 코발트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함
- 투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한국경제 2024.5.14) 한경재 기자

2. “닛산·토요타,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 라인 구축”

- 일본의 두 자동차 거물 닛산과 토요타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앞두고 생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가 13일(현지시각) 보도함
- 이는 전기차 시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으로 평가됨
- 닛산은 2028년 회계연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출시를 목표로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함
- 토요타는 2027~2028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62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5.14) 이태준 기자

3. ‘니켈 큰손’ 에라메트, 인도네시아 리튬 사업 뛰어든다

- 프랑스 다국적 광업·비철금속 그룹 에라메트(Eramet)가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 사업에 참여함
- 니켈 광산 분야의 큰손으로 평가받는 에라메트는 인도네시아 리튬 개발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의 주요 공급사로 거듭난다는 각오임
-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라메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와 협력해 리튬 광물 탐사를 진행함
- 양측은 인도네시아의 지속 가능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임

(더구루 2024.5.13) 정동용 기자

4. ‘배터리 1위’ 中CATL 육해공 공략 속도... 전기선박사업 확대

- 세계 1위 배터리 업체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가 프랑스 해운사 CMA CGM과 손을 잡고 전기선박 사업 확대에 나섬
- 9일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CATL이 CMA CGM과 합작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함
- 전날 양측은 전기선박, 상용차, 창고 및 물류 분야와 관련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힘
- 양측은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협력은 CATL의 전기선박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평가됨

(아시아경제 2024.5.10) 김현정 기자

5. BCG, 탄소 10만톤 제거하는 지속가능한항공연료인증서(SAFc) 구입

- 보스턴컨설팅그룹(이하 BCG)이 저탄소 솔루션 업체인 월드에너지(World Energy)로부터 지속가능한항공연료인증서(SAFc)를 5년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ESG투데이가 7일(현지시각) 전함
- 이번 계약은 BCG가 SAFc를 매입한 거래 가운데 최대 규모임
- 향후 5년 동안 10만 미터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계약은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BCG가 잦은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보다 저렴하게 감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임팩트온 2024.5.9) 홍명표 기자

1. SKC, 베트남에 세계 최대 생분해 소재 생산공장 구축

- SKC의 친환경 소재사업 투자사 SK리비오는 지난 11일(현지시각) 베트남 하이퐁시 경제특구에서 생분해 소재(PBAT) 생산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힘
- SK리비오는 SKC가 고강도 PBAT 소재 사업을 위해 종합식품기업 대상과 2022년 설립한 합작사임
- 1단계로 1억달러(약 1356억원)를 투자하는 SK리비오의 베트남 PBAT 생산시설은 연면적 2만2389㎡ 규모로,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7만t의 연간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예정임
- 2025년 3-4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K리비오는 추가 증설이 가능한 부지도 미리 확보해 향후 글로벌 확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함

(파이낸셜뉴스 2024.5.12) 김영권 기자

2. HD한국조선해양,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해상풍력' 거점 구축

-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필리핀에 해상 풍력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사업을 본격화함
- HD한국조선해양은 14일(현지시각) 필리핀 대통령 관저(말라카냥궁)에서 서버러스 캐피탈과 필리핀 수빅조선소 야드의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짐
- 향후 HD한국조선해양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및 합정 MRO(유지·보수·운영)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수빅조선소 야드 일부 부지와 설비를 임차하기로 하고, 세부 조건들에 대해 조율해 나가기로 함

(조선일보 2024.5.15) 이정규 기자

3. 포스코, 수소에 '또' 베팅... 호주 수전해 설비 기업 '하이사타' 투자

- 포스코홀딩스가 포스코이앤씨,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호주 수전해 설비 기업 하이사타에 300억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함. 효율과 비용 모두 잡은 차세대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수소 사업 육성에 본격 나섬
- 하이사타는 8일(현지시각) 1억1100만달러(약 1500억원) 규모로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마감했다고 밝힘
-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이앤씨, 신한금융그룹 등으로 꾸려진 투자 조합으로부터 약 2000만달러(약 27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함
- 2021년 설립된 하이사타는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수전해 설비 기업임. 포스코는 이번 투자로 수전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수소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임

(더구루 2024.5.9) 오소영 기자

4. 효성중공업, '100% 수소엔진발전기' 세계 최초 상용화

- 효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차세대 무탄소 전력 개발의 핵심 제품인 '수소엔진발전기' 상용화에 성공함
- 효성중공업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울산시 효성화학 용연2공장에 설치한 1MW 수소엔진발전기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힘
- 수소엔진발전기는 발전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감에 효과적임. 석탄 발전 대비 수소 100%를 연료로 활용해 1MW의 수소엔진발전기를 가동할 경우 연간 70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함

(CNB뉴스 2024.5.9) 선명규 기자

5. GS건설 자회사, 오만서 2.4조 해수담수화 시설 수주

- GS건설 자회사인 GS이니마가 오만에서 2조4000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짓고 운영함
- 환경부는 12일 GS이니마가 '오만 구브라3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고, 20년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하는 계약을 오만에서 체결했다고 발표함
-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역삼투막 원리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2027년까지 지어 하루 30만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임

(한국경제 2024.5.12) 안정락, 권용희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5.10(금) ~ 2024.5.16(목)

제공일시 2024 05 2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국, 송전망 5배 확대 위한 개정 최종안 발표... 신규 프로젝트에 20년 장기 계획 요구

(임팩트는 2024.5.16) 송준호 기자

-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지난 13일(현지시각) 10년 만에 가장 큰 송전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음. 이 개정안은 전기차,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AI)의 수요 증가로 지역 간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빠르게 전달하는 게 목표임
- 새 법안은 20개년 장기 송전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송전 수요를 파악해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함. 이는 FERC가 장기 송전 계획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다룬 사례이며, 2050년까지 탈탄소화 경제와 극심한 기상 이변에 잘 견디는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 FERC가 발표한 규칙은 현 정권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보조를 맞춤
-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2035년까지 무탄소 전력을 목표로 삼았음.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송전용량은 두 배, 지역 간 송전 용량을 5배 이상 확대해야 함
-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제공하는 세금 인센티브로 인해 전력망의 연결을 기다리는 발전 프로젝트의 용량은 약 2600기가와트에 달함. 이는 현재 미국 발전량의 두 배 수준임. 송전망 건설 속도가 지난 10년보다 2배 이상 빨라지지 않으면 IRA의 잠재적 혜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이 규칙은 미국의 전력망을 정비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표로 마련됐음. 송전 승인 및 비용 지불 방식을 간소화하고, 주간 송전 및 신규 프로젝트 비용 조달에 대한 새로운 요건 마련이 골자임
- 핵심 개정 사항은 △장기 계획 의무화 △장기 이익 고려 △비용 분담 방식 개선 △기존 시설 활용 극대화 △지역 사회 참여 강화 △규칙 개정 주기임
- 이전의 전력망 계획은 단기로 마련해 왔으나, 이번 규칙은 최소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함. 이는 에너지 수요 변화와 전환, 기후 변화와 같이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임. 또, 전력망 신설에 단순 비용과 효율성만 고려해 오던 방식에서 경제, 환경, 사회를 포함한 장기 이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방침임
- 신규 전력망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번 규칙은 이를 개선해서 혜택을 누리는 지역과 기업들이 비용을 더욱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음
- 기존 시설도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 함. FERC는 사업자에게 기존 송전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대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고 공개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장기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해 제출해야 하며, 프로젝트를 신청할 때 계획을 제출하기 전 주 정부 기관과 6개월 간의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함
- 이번 개정은 FERC가 2021년 중반부터 준비한 결과물임. FERC는 송전 계획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3만 페이지가 넘는 의견을 접수 받았음. 윌리 필립스 회장은 “2022년에 송전망 개발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전력 수요는 늘었다”라며 “지금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을 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